180도 진술 바뀐 윤석열의 복심들…특검 수사 '급물살'

충성파 김성훈, 치명적 진술
비화폰 삭제 등 구속 결정타
김태효, VIP 격노 증언 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들이 하나둘씩 과거 진술을 거둬들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내놓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측근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특검 수사도 덩달아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3대 특검이 임명된 지 약 한 달 만에 향후 수사에서 결정타로 작용할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각 특검팀은 추가 증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관련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강경 충성파' 인사인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뒤집고 새로운 진술을 내놨다.

그는 줄곧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실제로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발언도 담겼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라고 말하는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둘만의 통화 내용도 특검은 파악했다. 이 역시 김 전 차장의 진술 없이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을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섰던 경호처 내 '강경 충성파'의 대표 격이다.

그는 재임 당시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생일 축하행사까지 주도하는 등 경호처 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인사로 평가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실세 참모이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최근 순직해병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직접 목격했다고 처음으로 진술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조사결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하면서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VIP 격노설은 그간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전언 형태의 진술만 있었는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 전 차장이 직접 목격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이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짜리 채상병 사망 사고 보고를 받았고, 직후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회의 이후로 줄곧 이 사실을 함구해왔다가, 약 2년 만에 특검에서 그날의 일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당시 회의에는 김 전 차장뿐 아니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도 동석했는데, 특검은 조만간 이들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때 복심이었던 이들이 자신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특검에 쏟아내기 시작하자 당혹한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구속 이후 특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각 특검팀은 최근 확보한 윤 전 대통령 복심들의 새 진술을 향후 수사의 동력으로 삼고, 추가 증언 가능성을 염두해두며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강 시장, 하남다누리체육센터 개관식 참석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1일 광산구 하남다누리체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내빈들과 센터 수영장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민주 '윤 정부 거부법안' 7월 국회 재처리 속도전

방송3법·농업2법 절차 돌입
양곡관리법은 재정경감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막대한 재정 투입을 수반하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거쳐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3일 "7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 등 중점 추진 법안을 상임위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안 42건(중복 포함)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농업 2법'을 우선해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이른바 '농업 4법' 가운데 재해 관련 2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관련 소위를 넘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이미 상임위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보완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상법 개정안 처리 당시 기존 민주당 안에서 여야 간 쟁점으로 보류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두는 지역화폐법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전을 위해 '거부권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사실상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회 심의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다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기류도 감지된다.

농업 4법 중 하나인 양곡관리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이 법의 경우 올해 수확기 중 처리를 목표로 하되 재정 부담 경감책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통과 시 연간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역시 추가 상임위 논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연합뉴스

박문옥 도의원 "목포시의료원 도립 전환해야"

"의료 불균형 해소 출발점"

전남도의회에서 목포시의료원의 도립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 박문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지난 10일 열린 제392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시의료원을 전라남도 도립의료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기본가치"라며 "목포시의료원의 도립 전환은 전남 서남권 도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목포시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전남 서남권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이자 유일한 안전망"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이 의료기관이 재정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서남권 도민의 공공의료체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포시 자체 재정 여건만으로는 의료원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그리고 도립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시의료원은 1897년 목포항 개항과 함께 공립병원으로 설립돼 목포시를 비롯해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진도 등 서남권 6개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져 온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운영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저출생·양육정책 국무총리 표창

인구위기 극복 노력 공로

광주시는 13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저출생 대응과 양육 친화환경 조성 등 인구위기 극복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엄마·아빠가 맘편한 도시,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를 목표로 총 51개의 저출생사업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표 정책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지각장려금이라는 별칭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우수정책으로 소개됐다.

또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의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았다.

이밖에 광주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다자녀가정 전용 카드 운영 등 민간과 협력을 통해 양육가정에 실질적인 돌봄·의료·금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고광완 시 행정부시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